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2.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 7월 셋째 주 정세동향

2010년 7월 17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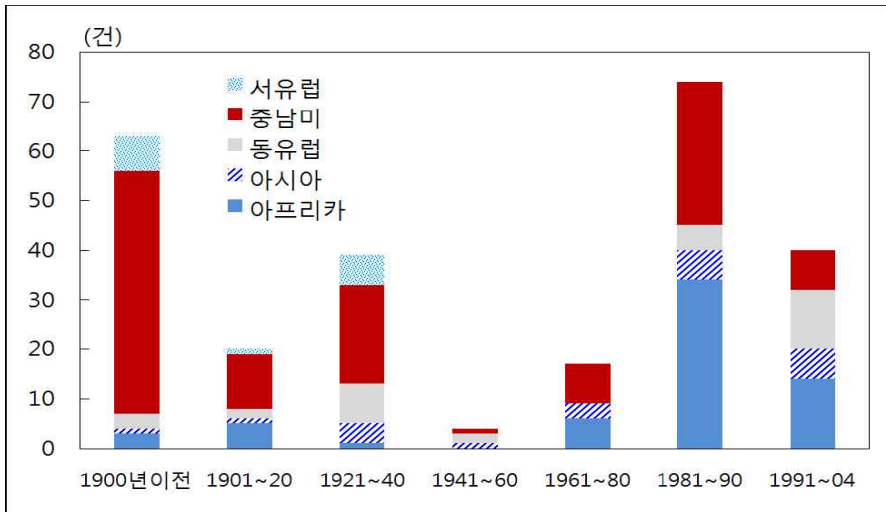
<b>01</b>	<b>세계경제</b>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b>04</b>	<b>세계정세</b>	한미 FTA
<b>06</b>	<b>한국경제</b>	민선5기 지방재정 건전화 5대과제
<b>09</b>	<b>한국정세</b>	지자체 지방재정 위기(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박근혜표 복지
<b>10</b>	<b>노동</b>	총연맹 - 민주노총, 7월 투쟁사업 계획 수립 - 타임오프제 분쇄 및 노동탄압 분쇄 산별연맹(노조) 투쟁 계획 -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b>12</b>	<b>여성</b>	<여성과 금융위기>(실비아 월비)_본문 주요내용 요약과 노조페미니즘 팀 토론

## ■ 세계경제

### 1.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 출처: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0-27호 / 2010. 6. 27 ~ 7. 3

- 1824 ~ 2004년중 총 257건의 국가부도가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74건)에, 지역적으로는 중남미(126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



- 1970~2002년중 부도가 발생한 47개국을 분석한 결과 부도발생 직전연도의 국가채무비율(對GDP, 이하 같음)은 41.5%, 총대외부채비율은 54.7%, 경상수지적자비율은 4.3%로 나타남. 부도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중 부채비율은 모두 상승하였으나 경상수지적자비율은 현저히 축소(4.3% → 2.6%)

1) 국가부도의 발생 및 처리과정

\* 1990년대 이후의 사례중 규모가 크고 국제적 관심 대상이 되었던 러시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및 우크라이나(이하 4개국)를 중심으로 분석

□ 국가부도의 발생형태

- 국가부도는 ① 국가가 사전에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모라토리엄) ②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거나(미결제) ③ 신용평가사가 부도상태로 평가(기술적 부도)하는 세 가지 형태로 발생.

① 러시아: 자국통화표시 채권에 대한 부도가 먼저 발생(1998.8월)한 후 외국통화표시 채권 부도가 발생(1998.12월)했으나 대외채무의 경우에는 구소련 채무에 대해서만 부도가 발생한 점이 특징. 1998.8.17일 모든 루블화표시 채권의 상환기한을 90일간 연장한다는 지불유예를 일방적으로 선언. 이어 1998.12.2일 및 1999.6.2일에 만기도래한 외국통화표시 채권인 국제채권단의 구소련채권을 미결제.

② 아르헨티나: 2001.12.2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1,400억 달러의 국가부채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 (러시아가 유예기간을 확정했던 것과는 달리 발표당시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국제기구 대출을 포함한 모든 국가부채가 지불유예 대상.

③ 에콰도르: 1999.9~2000.2월중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통화표시 채권인 브래디 채권과 유로채권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

④ 우크라이나: 1998.9월 무디스로부터 자국통화표시 채권에 대해 기술적 부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00.2월에는 일부 외국통화표시 채권(마르크화 및 유로화표시)의 상환을 불이행.

□ IMF의 자금지원

- IMF의 자금지원은 대부분 부도발생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자금수혜국이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자금공급이 중단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나 부도 이후 채무조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제시되면 자금지원이 재개.)

□ 채무조정

- 채무조정은 만기연장, 부채감축, 일부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년 6개월 이내에 조정이 완료.

① 만기연장: 가장 기본적인 채무조정방식이며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과 교환(debt swap).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는 3~1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는 20~40년까지 연장.

② 부채감축(haircut): 가장 강도가 높은 채무조정방식이며 채권단의 손실로 귀속.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60% 정도의 원금이 탕감되었으며 에콰도르와 우크라이나는 30% 내외의 부채감축이 이루어짐.

③ 현금지급: 채권단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이자의 전부(아르헨티나 및 에콰도르) 또는 일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25% 이내)를 현금으로 지급.

④ 채권단 참가율: 부도가 발생한 국가가 채권단과 직접 접촉하여 채무를 조정하는데 채권금융회사의 90% 정도가 협상에 참여하나 아르헨티나는 참가율이 저조한 편(69%).

## 2) 국가부도에 따른 영향

□ 금융시장 접근성 하락: 평판손실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며, 접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용스프레드와 신용등급 악화로 조달비용이 급상승. 부도경력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약 7년 정도 지속. 부도국가가 국제금융시장에 되돌아가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되었으나 충격의 여파가 컸던 러시아는 7년,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도 자금조달이 차단된 상태.

□ 경제침체: 국가부도와 GDP감소간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부도가 발생한 당해 연도에는 경제성장을 하락이 뚜렷이 나타남. 이는 국가부도 후 자주 나타나는 은행위기(banking crisis), IMF의 엄격한 자금지원 조건 등에 기인하며 어느 정도 충격을 벗어난 이후에는 빠른 경기회복세로 복귀.

□ 정치적 혼란 가중: 국가부도시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 재무장관 교체 등 정치적 비용이 발생. 19개국에 대한 조사 결과 정권이 바뀐 경우가 절반이나 되었으며 분석대상 4개국에서도 3개국의 정권이 교체.

□ 여타국가로의 전염: 국가부도는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주변국으로 전염. ① 대외부문: 부도국가의 경기침체로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됨. (러시아에 대한 수출비중이 25%에 달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 1998년 러시아 부도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도위험이 증폭.) ② 금융익스포져: 부도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부실화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은행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짐. (1980년대 남미국가에 대한 대출이 많았던 미국 등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남미 국가 부도 이후 부실채권 급증으로 어려움에 직면.) ③ 경제발전단계 및 지역적 유사성: 특정국가의 부도가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거나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가그룹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되어 이들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발생. (러시아의 국가부도는 신흥시장국의 신용스프레드를 동반 상승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 등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의 동반부도 위험을 높였음. 또한 2001년 아르헨티나의 부도는 남미국가 전체로 전이되어 2002년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 IMF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사태로 이어짐.)

□ 은행위기 발생: 국가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국에서 은행위기(banking crisis)가 동반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 1970~2000년 45건의 국가부도중 60% 이상이 은행위기와 동반 발생했으며 국가부도만 발생했을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증폭. (국채투자 비중이 높았던 러시아 상업은행들은 정부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뱅크런이 급속히 확대.) 이에 정부는 은행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예금인출을 금지함으로써 은행손실이 예금자에게 전가되기도 함.

## 3)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 남유럽 국가 가운데 부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꼽히고 있음. 블룸버그가 실시한 서베이에서도 이 세 나라는 부도 또는 EMU탈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특히 그리스 국가채무의 부도를 예상하는 응답자 비율이 73%에 이르고 있음.)

- 과거 국가부도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대부분의 남유럽 국가들은 이미 부도의 문턱(threshold)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리스 문제는 유동성위기(liquidity crisis)가 아닌 지급불능위기(insolvency crisis)이므로 국가부도를 선언한 후 채무조정에 들어가 채무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남유럽 주요국의 국가부도관련 지표 (2009년)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헝가리 과거 국가부도국의 부도직전연도

총대외부채 170.9 238.7 172.3 119.1 162.7 54.7

공공대외부채	90.9	61.3	29.1	52.3	45.3	36.4
경상수지적자	-11.2	-10.1	-5.1	-3.4	0.4	-4.3
경제성장률	-2.0	-2.7	-3.6	-5.4	-6.3	1.8
국가채무	125.9	77.3	46.1	108.9	74.5	41.5

- 최근 그리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위기와 과거 국가부도 사태는 적지 않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① 그리스는 유로존이라는 선진국 통합경제권의 일원인 반면 과거 부도사태를 겪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통합경제권에 속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② 과거에 비해 금융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높아져 전염효과가 훨씬 커질 가능성.

- 이러한 차이점은 그리스 국가부도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파장을 작게 할 수도 있는 반면, 크게 할 수도 있는 양 측면이 있음. 그리스가 유로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사시 회원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질서있고 포괄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한편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국가부도사태의 전염력이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의미.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질서있고 포괄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

## ■ 국제정세

### 한미 FTA (뉴스 정리)

#### 1. 자동차, 쇠고기 사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음. 그가 소속한 민주당도 노동조합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어 반대. 그러나 부시가 추진한 한미 FTA를 폐기할 뜻을 비치던 그가 집권중반에 들어서 비준 쪽으로 전환. 이명박 정권이 비준을 집요하게 요구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의 정책변화에 기인.

문제는 자동차, 쇠고기 분야에서 한국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인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지난 20년간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형해화. 미국의 대형 승용차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뜯어 고치는 바람에 대형차와 소형차의 세율차이가 없어진 것. 쇠고기도 미국 의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제2의 촛불사태를 촉발할 만큼 휘발성이 강함.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현재 금지된 상태. 일본은 뼈,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지만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비교적 어린 소다.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적 저항에 의해 한국 정부가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가동,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치의 단서 조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로 매우 모호하게 달려있고, 민간의 자율 규제에 따른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 2. 한미 FTA 재개 배경

앞서 USTR은 13일 자체 홈페이지에 커크 대표의 일정을 추가로 게시하면서 14일 중으로 양국 통상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토론토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커크 대표에게 한미 FTA 쟁점현안을 오는 11월초 방한 이전까지 타결하도록 김 본부장과 협의에 나설 것을 지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까지 쟁점 해결, 내년 초 의회 비준안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한·미 FTA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처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적은 없었음. 때문에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쟁점 해소의 데드라인으로 11월을 제시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 미국입장에선 국내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인화성 강한 재료인 만큼,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건드리겠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의 세가지 희망사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미국의 수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아시아와의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것.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미 FTA 재논의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최근 그가 보여준 자유무역 드라이브의 한 사례라고 진단.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언급하며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를 관철시킨 것이나 G20 정상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

### 3. 미국 노총 등 입장

2007년 예비 협정 당시도 미국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AFL-CIO)의 테아 리 부위원장은 "한미 FTA는 심각한 자동차 무역역조 등 불균형적인 시장접근과 노동자 권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 등의 3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포드(Ford)와 미국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Workers)은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이 충분한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 4. 미국의 이해관계

한미 FTA 부활(Reviving the Korea-US Trade Agreement)

Interview with Jeffrey J. Schot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0.6.30.

-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미국수출은 연 100~110억 달러 늘어날 것.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증가인 것.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쌍무협정. 몇몇 서비스에 대해 한국 시장을 여는 것은 관건. 특히 금융 서비스, 보험, 항공배달 서비스, 텔레콤 등임. 또한 미국 농축산 부문은 한국의 시장 개방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것.
- 한국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음. 미국 시장은 이미 광범위하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
- 오바마가 한미 FTA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로는 지난 일 년간의 변화가 작용.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천안함 침몰. 미국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대항국들) 한미 동맹에 약점이 있다고 보이고 싶지 않음. 따라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한국이 EU 등 다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도 한미 FTA 비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한-EU FTA가 먼저 비준되면 미국에 열릴 수 있는 한국시장이 EU로 가게될 것. 특히 금융서비스, 자동차 등.

###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파키스탄 북부서 연쇄 폭탄테러, 100여명 사망 0710 뉴시스

10일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지역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00여명이 사망하고 115명 이상이 부상.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폭발은 페샤와르 북서부 마흐만드 지역의 정부청사 인근에서 발생. 페샤와르 마흐만드 지역은 탈레반과 알케에다 반군이 활동하는 주요 거점지역 중 하나로 이번 사고는 올해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사고 중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파키스탄 '가지군' 제2탈레반 되나 0701 한겨레

파키스탄 제2의 도시인 동부 펀자브주 라호르시에서 1일 42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치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라호르

시내 중심의 수피교 성인이 묻혀있는 이슬람 성지인 다타 다르바르 사원이 타겟. 그동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수피교를 이단이라고 간주하고 공격해왔음.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자체 조직된 이른바 '가지군' 이 새로 주목. 이들은 2007년 7월 파키스탄 보안군의 '붉은 사원' 공격으로 수백명의 학생들이 숨진 사건에 격노한 친척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반정부 군. 가지군은 북서부 오라크자이를 근거지로 이 지역을 장악한 파키스탄 탈레반과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 단체는 2009년 10월 이슬라마바드에 벌어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소 폭탄테러, 2007년 9월 22명이 숨진 군사시설 폭탄공격 등 주요 테러사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했던 무장세력들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테러에 나서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파키스탄, 아프간에 '반미 교두보' 마련 본격화 0625 경향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동남부의 강경 탈레반 무장단체로 알카에다와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하카니 네트워크' 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정부의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해.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실패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서 파키스탄계 세력을 일종의 교두보로 아프간 정부에 심으려는 포석으로, 아프간 전쟁에 협조하면서도 자국 영토에 거점을 둔 이 단체를 토벌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외면. 파키스탄과 아프간 정부는 벌써부터 '미군 떠난 아프간' 의 전략적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파키스탄은 특히 최근 2개월간 카르자이 정부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역시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짐. 카르자이는 6월에 하카니 네트워크와의 연합에 반대해온 친미 성향의 인물들을 경질했음

파키스탄, 美 반대 불구 이란과 가스거래 강행 0622

파키스탄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가스 거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키스탄 총리 "이란과의 가스 거래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면 재고할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제재라면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해. 미 아프간·파키스탄 특사는 지난 20일 "파키스탄은 이란과의 가스 거래를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대이란 제재는 (이란과 가스를 거래하는) 파키스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中-파키스탄 핵거래, 印 NSG 진입에 암초 0622 연합

핵공급그룹(NSG)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원자력 기술이나 핵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핵무기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파키스탄과 원자력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음. 하지만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은 NSG에 가입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거래는 허가되어야 한다고 항변. 미국은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동시에 핵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지난 2008년 민간 핵협정 상대인 미국의 '밀어 붙이기'식 외교 덕에 NSG의 핵거래 승인 절차를 무사 통과했음. 이같은 NSG의 인도 핵거래 승인은 NPT 체제를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핵공급그룹(NSG)의 승인 없이 이뤄진 중국의 대파키스탄 핵거래가 인도의 NSG 회원가입에 암초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 ■ 한국경제

###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현대경제연구원, 7/14)

#### 1. 민선자치 15년의 지방재정 평가

- 지자체의 채무가 1995년 11.5조원에서 2007년 18.2조원으로 느리게 증가했으나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25.6조원까지 급증했다. 지난 9년간의 증감을 보면 인천시가 1.8조원 266% 급증했으며, 대전시는 오히려 0.2조원 25.2% 감소했다.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곳에 이른다. 1995년 63.5%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0년 52.2%까지 하락

했으며, 재정자립도 50% 미만이 지자체가 211곳(85.8%)에 달한다.

\* 지방채무잔액지수=(지방채무순현재액/일반재원결산액)×100

채무상환비율=(최근4개년 평균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최근 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100

표 5 최근 9년간(2000-2009) 광역시도의 채무 증감 (단위, 천억 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증감액	12.3	2.7	2.7	18.0	-1.3	-2.0	1.6	9.1	4.8	2.0	3.6	1.1	5.3	1.5	5.0	1.1	67.6
증감률	65.9	11.2	15.5	265.6	-13.6	-25.2	35.2	30.4	58.1	43.0	39.0	12.6	76.7	11.8	44.1	17.2	36.0

표 6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

중앙정부 예산 (256.5조원, 62.1%)	지방자치단체 예산 (156.7조원, 37.9%)					
	자체수입 (86.4조원, 55.1%)		의존수입 (60.6조원, 38.7%)			지방채 (9.8조원, 6.2%)
	지방세(45.2조원)	세외수입(41.2조원)	교부세(28.1조원)	보조금(32.5조원)		

2. 지방재정 악화의 4가지 구조적 원인

- (1)취약한 세입구조: 조세탄력성이 작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46%로 높고, 지방세의 예산대비 비중은 34%, 국세대비 비중은 21%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재정책중 및 건전화의 유인이 부족하다.
- (2)경직적 세출구조: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38.9%에 달하며 인건비 등 일반공공행정을 합하면 50%에 달하는 등 경직적 세출구조는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3)느슨한 지방채 관리: 지방채 발행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가 많아 2009년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대비 161.7% 증가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채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09년 6.2%로 크게 상승했다.
- (4)미흡한 위기관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진단 기준이 애매하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는데 그치며, 재정공시의 항목과 절차도 너무 포괄적이다.

3. 미국·일본의 지자체 재정위기 관리제도

-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방파산법에 기초하여 재정파산제도를 운용 중이며, 재정적자 지속과 채무불이행 지속을 재정위기로 정의하고,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지원, 주지사의 파산관재인 파견, 파산법에 의한 채무조정 등 3가지 유형의 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최근 재정위기 판단지표를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지자체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등급을 3단계로 부여하고, 조기건전화 등급의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방안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민선5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5대 과제

- 첫째,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고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는 지자체의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밀착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채 발행한도의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거래를 시장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 운용 및 진단 결과에 대한 공시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한다. 넷째, '2할 자치'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세수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세입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경기에 대한 조세의 탄력성이 큰 소득·소비관련 세율은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재산관련 세율은 인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인을 제고한다.

성남시 후폭풍 ... 지방·공사채시장 '흔들' (내일신문, 7/14)

지방채 금리 하루만에 급등 ... 기관투자자들 '불안'

지방공기업 채권발행잔액 1년 반만에 4배로 급증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후 지방·공사채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안정성 면에서 거의 국고채급으로 인식됐던 지방·공사채의 신뢰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지방·공사채를 사겠다는 기관이 사라지면서 지방채 금리가 급등하는가 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1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연기하는 등 ‘연쇄반응’ 이 일어나고 있다.

◆ “은행채 대신 샀더니만...” 기관들 불안 = 1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 등을 사겠다는 주문이 사라졌다. 메리츠증권증권 민동원 연구원은 “지방채 거래가 거의 안 되어 지방채 금리가 4bp 이상 올랐다” 고 말했다.

기관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 증권사의 채권브로커는 “지자체의 개발공사채의 경우 금리도 좋고 신뢰성도 좋아 물량이 없어 못 팔 정도였다” 면서 “그러나 성남시 사태가 나면서 기관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지방공사채는 괜찮은 건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민동원 연구원은 “최근 지방·공사채가 기관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 “기존에 은행채를 샀던 기관들이 은행채 등 악재 때문에 신뢰성도 높고 가격도 괜찮은 지방·공사채 쪽으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가 형성됐다” 고 말했다.

◆ 개발공사채 스프레드 확대 불가피 = 불똥은 특히 지역개발공사채 쪽으로 튀는 모습이다. 지역개발공사채의 경우 지자체의 지급보증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개발공사들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문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남시 사태로 인해 신뢰성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기초·광역자치단체 산하의 개발공사들이 재무건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었던 점, 게다가 이들 개발공사채들이 대부분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 있는데 부동산 경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한꺼번에 부각되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박형민 연구원은 “이번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은 지방정부들의 재정위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면서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개발공사들의 채권은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 신환중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성남시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전성이 훨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에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 이라면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그동안 방만한 지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채권을 남발해왔지만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어려워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일부 개발공사 자산대비 70% 육박 ... 건전성 빨간불 = 실제 지자체 산하의 개발공사의 채권발행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코스콤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개발공사 채권잔액은 4.7조원이었지만 1년 반이 지난 2010년 6월말에는 17.4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개발공사들의 자산 대비 채권발행액은 평균적으로는 3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 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채권발행액이 자산 대비 7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자산이 7500억원 수준이지만 채권발행잔액은 5100억원에 달해 자산 대비 비율이 67.5%에 달한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도 자산대비 채권발행잔액이 59.8%로 위험수준이다.

지방개발공사채 발행잔액



\*자료: 코스콤  
\*상징·비상징 채권, 올해 6월말 기준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1] 선심 공약에 명드는 재정(조선일보, 7/15)  
너도나도 무상급식 약속 교육 공약 예산의 59%, 재정자립도 아랑곳 않고 인기 영합 공약 쏟아내

관련 사설 제목  
호화청사 짓고 빚 못 갚겠다 나자빠진 성남市 (조선)



성남시 채무유예선언, 책임소재 엄중히 가려야 (매경)  
 지자체 방만경영 쫓아 터진 성남시 ‘모라토리엄’ (한경)  
 빚더미 지자체에 파산제도 도입하자 (중앙)  
 위기의 지방재정 성남시뿐만 아니다 (경향)  
 성남시의 염치없는 채무 유예선언 (한국)  
 반면교사 삼아야 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서울)  
 포퓰리즘과 결별해야 지방재정 산다 (국민)  
 재정위기 지자체 뼈를 깎는 구조조정 해야 (매경)

## ■ 한국정세

### 지자체 지방재정 위기

지자체, 삽질예산 펴며 쓰다 ‘빚방석’ (한겨레) - ‘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남일 아니다  
 - 청사 세우고 도로 깔고 ‘이자’ 로 재정 축내/ 인천, 빚 10조원 1년 이자만 3000억원 달해 / 화성·안산 재정부족 탓  
 ‘시유지 매각’ 고육책

12일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그러나 곳곳에 구멍이 난 지방 정부는 성남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시성·낭비성 예산 운영이 가져온 재정위기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나온 수도권 지방정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건전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이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부채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선 뒤 한숨이 늘었다. 애초 인천시의 빚을 7조원가량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선 직후 점검해 보니 2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 있었다.

시 자체 부채가 올해 말 2조7526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시의 각종 사업을 대행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도 6조6000억원이어서 이를 더하면 9조3000억원이 넘는다. 1년에 이자만 3000억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인천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83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4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에 1조594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에 8585억원을 더 쏟아 부어야 한다. 송 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있는 쿠웨이트로 날아가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쓸 수 있는지 알아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600억원이 들어가는 새 주경기장 건설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현재 1750억원의 적자를 내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중이다. 택지개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익금 15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예산을 짰으나, 택지가 잘 분양되지 않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올해 지방채 한도액 2000억원도 이미 다 써버려 1200억원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와 관련해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유지 매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도 올해 추경예산에서 세입은 279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609억원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시는 신길동의 시유지를 423억원에 내놓았다.

그나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편이고, 다른 지방의 재정상태는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강원도 산하의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6730억원의 부채를 떠안아 하루에 이자만 1억원씩 내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판대리 주민 40여명의 통행을 편리하게 한다며 지난해 10월 무려 382억원을 들여 38대교를 놓았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도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직영 공공 시설물들의 고정비용으로 한해 491억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177억원에 그쳐 314억원의 적자가 났다.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20일 새 청사 건설을 중단했다. 이미 16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공사비 300억원을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364억원이 투입된 새 구청사 구조물은 당분간 흉물로 남게 됐다.

이호 풀뿌리정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낭비하는 예산을 감시하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결정됐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시민감사관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공방 / 정부 “지불유예는 과도한 대응” / 성남 “빚대책 내놓자 적반하장”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성남시 사이에 ‘과잉 대응’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도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성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판교특별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빌린 돈의 상환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달까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환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선언이 나온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알렸을 뿐인데 지급유예 선언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쇼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지자체 공간이 거덜날 정도의 재정운용에 대해 뒷집만 지고 있던 정부가 채무이행 방법 제시를 힐난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돈은 모두 5200억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2300억원은 곧 엘에이치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성남시 몫의 추정초과수의 2900억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재투자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성남시는 한꺼번에 상환을 할 수 없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박근혜 복지에 민주당 위상 '흔들' / 민주당, 더 왼쪽으로 가지 않으면 승산 없어 (창비주간논평)

지난 7월 7일 발표된 민주당 '민주정부10년 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결론은 진보노선의 강화였다. 당일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사회적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중략)

박근혜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일관되게 '진보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5월에 했던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그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를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감독 및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논거였다. 진보진영에서나 나올 법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계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에 대한 선호를 표출한 주장이었다.

같은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30주기 추도사에서는 "아버지가 경제성장을 이룩하셨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그 꿈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진보의 의제로만 여겨졌던 복지를 보수의 의제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읽히기도 했다.

---

## ■ 노동

### □ 총연맹

민주노총, 7월 투쟁사업 계획 수립

총연맹은 9일 2010년 상반기 투본 6차회의를 갖고 7월 투쟁 사업 계획을 수립했음

4대 투쟁 사업은 ▲ 타임오프 분쇄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7월 12일부터 지도부 단식농성 투쟁, 7월 15일 야5당 공동토론회 등 대정치권 사업, 7월 14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법 재개정 결의대회, 7월 2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 등), ▲ 전교조, 공무원 탄압 분쇄(여론전, 야당과 연대정치전선 강화 등), ▲ 4대강 환경파괴, 공기업 민영화, 언론 장악 등 사회공공성 파괴 정책 분쇄(7월3일, 17일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국민결의대회 등), ▲ 반전평화 투쟁전선 확대(천안함 진상규명 사업 등) 임.

□ 타임오프제 분쇄 및 노동탄압 분쇄 산별연맹(노조) 투쟁 계획

조직	현황
건설	○ 7/27(화) 연맹 중집
공공운수	○ 도시철도노조 7/13(화) 조합원 결의대회 예정 ○ 발전노조 단협해지 관련 6/22~동서지부 6/29~중부지부 7/6~서부지부 지명파업 진행 중 ○ 사회연대연금지부 7/5~9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진행 중 ○ 7/17(토) 노조탄압, 타임오프 관련 공공운수 결의대회(장소 미정)
공무원	
교수	
금속	○ 7/7(수) 미타결 사업장 중심의 주야 4시간 파업 ○ 7/9(금) 미타결사업장 확대간부 수련회 겸 공동결의대회 및 재벌사 앞 투쟁문화제 ○ 7/14(수) 미타결 사업장 중심으로 주야 4시간파업 / 7월 15일(목)~16일(금)은 지부 쟁대위 판단에 따라 추가파업을 배치함. ○ 7/21(수) 금속노조 전국 총파업 실시 (미타결 및 타결사업장 조합원 모두 결함키로 하며 서울 및 영남권 집회 등 권역별 파업집회 배치. 수도권 및 충청권은 서울 집결) ○ 7/12(월)~ 조합 임원 및 사무처 현장순회 ○ 7/12(월)~ 각 지역 노동청 앞 농성 및 집회 ○ 7/23(금) 파견확대 저지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기획투쟁
대학	
민주일반	
보건	○ 7/14(수) 전남대병원 파업 전야제부터 전국 집중 ○ 8월 중순 2차 조정신청 사업장 파업투쟁 돌입 ○ 8월 중순 2차 조정신청 사업장 집중투쟁
비정규교수	
사무	○ 7/7(수)~8(목) G20 관련 국제워크숍(고려대학 국제심포지엄)
서비스	
언론	○ KBS본부(본부장 염경철) 6/25 조정중지결정 - 6/10(목)~16(수) 쟁의행위 찬반투표(845 재적 / 788 투표 / 찬성735(93.3%)) - 7/1(목) 14:00 조합원 총회 - 7/7(수) 19:00 KBS본부 파업 시민문화제 - 7/8(목) 대의원대회 ○ 7/5(월) MBC본부 이근행 본부장 등 사전구속영장 기각
여성	
전교조	○ 지역별 교사공무원대책위 차원의 집회투쟁 진행 ○ 대구, 충북, 부산 등 지부별 시도교육청 단식투쟁 및 농성 진행 ○ 6/29(화) 교과부와 단체교섭진행(교과부장관 불참 예정) => 2~3차례 교섭 진행 후 투쟁계획 확정 예정
화학섬유	○ 동서식품 38개 단협개약(안) 제출 ○ LG 등 교섭 난항 => 교섭진행 경과에 따라 투쟁계획 확정

□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비정규 노조활동가의 안타까운 실업급여”

- 활동가 임금도 못주는 노동운동의 쓸쓸한 풍경(참세상)

비정규직 조직활동가를 양성해야 했던 열악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006년 조합원 1인당 1만원의 비정규 기금을 건어 50억을 조성해 조직활동가를 양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전략조직화사업을 기획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된 조직활동가들은 사실상 비정규직이었다.

언론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발표된 노 모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 모 서비스 연맹 조직부장은 바로 이 비정규직 조직활동가 출신이다. 서비스연맹 1년 예산은 6억원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재정 규모이다. 당시 비정규직 조직활동가는 서비스연맹에 7명이 할당되었으나 이후 돈이 없어 간신히 두 명만 활동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재정이 모자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노동운동활동가였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상황 오히려 감내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두 사람에게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월까지 서비스연맹에 근무해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았다” 며 강 모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공모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노 부위원장의 부정수급 문제는 악질적인불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활동을 하던 계약직 활동가에게 최소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부위원장은 150일간 실업급여로 대략 월 86만 4천원과 연맹에서의 추가된 분, 분기별 상여금까지 150여만원 정도를 받았다. 물론 이들이 현행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부위원장직 사퇴가 거론되기도 했다.

타임오프 시작되면 생계 더 어려워

이번 사건으로 민주노총을 노동기생충이니 귀족노조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노동운동 활동가의 현실을 더욱 처량하게 한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서비스 연맹은 경찰조사에서 의도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운동에 3년이나 헌신하던 비정규직 활동가가 어떻게든 활동하도록 없는 재정에 무리해 채용한 것이 죄라면 죄라 더 안타깝다. 또 7월 1일부터 시행할 타임오프 한도 탓에 열악해질 노동조합 재정으로 더욱 힘들어질 생계를 감내하며 노동운동 판에 남아 있을 활동가들의 처지가 쓸쓸하다

---

## ■ 여성

---

### 성주류화 전략

1. <여성과 금융위기>, 실비아 월비 \_ 본문 주요내용 요약과 노조페미니즘 팀 토론

#### 금융구조의 성별화

-금융위기는 금융의 규제 및 감독의 실패가 초래한 결과. 새로운 금융수단과 파생금융상품들은 금융시스템의 극심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또한 많은 자본과 기업주들이 투명성과 공적영역에 대한 보고를 축소하면서 규제회피, 비밀리 거래되는 세계적 금융흐름의 증가와 조세도피 등의 행위는 절세와 탈세를 통해 공공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냄. 이는 빈곤을 완화하거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금을 축소시키고 발전도상국들의 수익을 악화시킴.

-여성은 금융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결정에서 과소대표 되어있음. 여성이 과소대표 된 금융을 규제 감독하는 제도들은 금융자본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급여성활자의 경제와 가정경제를 희생시킴으로서 성별 불평등을 야기했음. 금융구조의 통치성에서 성적 불평등은 위기의 원인의 일부를 구성함. 인민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금융의 통치성 실패를 규제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함. 여성은 금융에 관한 정책에서 배제된 동시에 그 위험으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이며, 금융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우선순위와 실천을 통해 전체 사회

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금융위기의 성별화된 영향

-금융위기의 결과로 발생한 경기침체는 세계 전역에서 고용 감소, 실업 증가시킴. 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결과가 나타났음.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위기 당시 필리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이 증가했고 비공식 노동과 비급여 가사노동이 더 증가함. 경제위기는 빈곤을 증대시키고 여성에게 더 불리한 결과 초래. 발전도상국의 수출지향적 산업에 대한 타격과 이주노동자의 실업 및 수입 감소는 여성에게 불리함.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축소는 재생산을 위한 보건 양육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가정 내 보건과 양육에 대한 여성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킴. 교육/ 식량/ 신용에 대한 접근, 주택가치 하락, 재정위기에 따른 복지축소 등 경제위기의 충격은 성별화되어 나타남.

###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분석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와 지원은 납세자로부터 대규모의 공적기금을 이전시켜 파산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성차별적 결과를 초래함. 고배당의 수령자와 지불 결정자가 압도적으로 남성인 금융기관의 수증으로 기금을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 중역이사회의 선임 스텝의 성별구성, 임금과 상여금의 최고보상제한, 법인기업의 목표에 성적 평등의 원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에 있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축정책보다 여성에게 유리함. 긴축정책은 교육과 보건부문 예산을 절감하고 여성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

-조세소득의 지출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성별화 되어있음. 납세자들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 또한 높음. 한편 조세지출의 혜택은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은 여성들에게 돌아가고 보육 교육 보건 등의 부문에 쓰이기 때문. 절세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는 투명해져야하고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 이는 친 여성적 친 빈민적임.

-거대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남성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더 많은 경우 성차별적임.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에 더 민감한 경우 남성 지배적인 전통산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성차별적이기 쉬움.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결정할 때 성 평등과 관련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파산한 주택을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주택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모기지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보다 더 친빈민적 친여성적임. 주택과 같은 기초필수품의 탈금융화는 안정성을 촉진시키고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보호.

### <토론된 쟁점>

-금융위기를 규제 감독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문제로 지적하며 통치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주의적 입장. 새로운 통치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여성과 마이너계층 까지 포함한 개혁을 요구. 그러나 탈규제는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 중 하나인데 원인으로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한편 90년대 성주류화 전략의 성과가 재정축소 정책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수반하고 있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주류화 전략이 10년 동안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케인즈주의/비교자본주의 틀 안에서 비판과 정책참여를 주장함. 성주류화 전략이 케인즈주의와 시민주의와 동보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소멸한 측면 있음.

-성별화가 금융위기 충격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으나 젠더의 접근에서 왜 성별화인지, 그 실내용이 무엇인지 담기지 못함. 계급적 성격역시 드러나지 않는 성주류화의 특징을 보임.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설정하고 여성을 복지의 수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책 대응에서도 복지수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성주류화전략 초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국여성운동 단체나 노조에서도 성주류화 전략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 성별화된 관점으로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금융위기를 페미니즘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며, 가족임금/ 가족/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성별화 된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이 ‘여성이 더 많이 피해다’ 라는 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자체가 젠더 편향적임과 위기 시기 생산과 재생산 부문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정리됨.

2. [기사] 유엔, 여성통합기구 ‘유엔여성’ 신설(여성신문, 7/9)

- 내년 1월 ‘유엔 여성 (UN Women)’ 출범. 2006년부터 전 세계 여성계가 유엔에 꾸준히 촉구해온 여성 인권·권익 총괄 통합기구임.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기존 유엔 여성 예산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3067억원)의 2배에 달하는 5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

- 여러 위원회로 분산되 있던 여성문제를 통합해 관장. 구체적으로 성문제 및 여성지위 향상 담당 특별고문실, 유엔 여성개발기금, 여성지위향상국,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유엔국제연구훈련연구소 등 4개 기구를 단일 기구로 통합.

- 이번 결의안 통과는 전 세계 300여 개 여성단체들이 연대해 이뤄낸 최대 성과로 평가하고 있음. 전 세계 여성계 축제 분위기.

-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유엔 여성의 초대 수장이 될 여성 인사. 통합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USG(사무차장급,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바로 아래 단계)로 격상될 이 자리의 후보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싱가포르 출신의 노일린 헤이저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총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어린이·무력분쟁 관련 특별위원, 루이스 무시키와보 르완다 외무장관 등 25명가량이 물망에 오르고 있음. <끝>